

황우석 사건과 젠더정치

김경례 (전남대)

1. '황우석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신드롬', '광풍', '쓰나미', '사태' 등으로 표현될 만큼 지난 2005년 말, 한국사회는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아마도 2005년은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이 표출되고 전 구성원이 흥분과 절망에 휩싸였던 역사상 최초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MBC PD수첩의 난자수급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의혹제기로 촉발된 황우석 사건은 연구 자체의 진위공방, 언론윤리, 각종 음모론의 대두 등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특허수호와 연구재개를 외치고 있지만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수사를 거쳐, 최소한 학문적으로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황우석 사건을 거치며 우리는 한편으로는 국익론과 결합된 강고한 과학주의의 신화를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화를 만들어낸 '정-경-학-언(정치, 경제, 학계, 언론)'의 동맹¹⁾을 추적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사회와 별개의 영역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과 내적으로 얽혀 있는 '복합사회 현상'(김종영, 2006)이라는 것을 목도했다. 또한 윤리적, 사회적 고려 없는 과학기술이 단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속에서 과학기술 자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의 민주화'(김환석, 2006)를 위한 대안 모색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²⁾

- 1) 황우석신화를 만들어낸 정부, 정치, 사회, 경제, 학계의 동맹관계에 대해서는 강양구·김병수·한재각(2006), 「침묵과 열광」 2장 참조
- 2) 그간 생명윤리법의 제정과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알리는 담론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온 생명공학감시연대가 지난 1월에 개최한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나 민교협(2006. 3월) 학술토론회('황우석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2006년 「역사비평」 봄호에 특집으로 편성된 '과학기술학으로 본 황우석사태'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황우석 사건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은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젠더 정치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황우석 사건의 기술적 매개였던 배아복제연구는 여성의 몸 및 재생산과 관련한 제반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본가, 국가의 이해관계만큼 젠더관계와도 중첩되기 때문이다(Wajcman, 1991). 실제로 황교수의 배아복제연구는 여성의 난자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난자채취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의과학적 기술의 개입은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을 동반한 심각한 건강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³⁾ 더욱이 이러한 건강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난자채취과정이 진행됨으로써 연구윤리의 위반뿐만 아니라 난자제공 여성의 선택권 또한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는 황우석 사건을 거치면서 기술연구와 결합된 국가주의, 가족주의, 경제성장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몸을 동원하며, 여성에게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황우석 교수가 윤리와 진위문제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수많은 여성들과 '꽃길행사'는 위험성 담론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당혹스러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비이성적 국익론,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김명진, 2005)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우리사회에서 복제기술과 젠더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근본적 원인일 것이다. 사회적 의제화는 고사하고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알려지면서 위험성 담론이 부각되었을 때조차도 논쟁의 중심은 배아의 지위와 인간개체복제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였지, 난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것인지, 수정된 배아는 누구의 자궁에서 클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했다(하정옥, 2000:193). 또한 2000년부터 제기된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배아를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 논의가 중심이었지, 여성의 몸에 대한 고려와 여성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허라금, 2003).⁴⁾ 이러한 상황은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로여서 황우석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⁵⁾

한편, 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는 시험관야기 기술을 포함한 불임시술의 발전과정과

3)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등 35개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난자채취로 인해 부작용과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 중 2명의 국가대상 손해소송이 진행 중이다.

4)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등이 여성의 인권과 난자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을 펼치기는 하였으나 위험성 담론 속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이지는 않았다. 손봉희(2006), "생명과학기술 대응활동-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생명과학기술 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p.95 참조

5) 이에 대해서는 윤정은, "여성인권 뒤로하는 여성단체, 왜? -난자윤리문제 가장 늦게 입장 표명해 빈축", 일다, 2006.1.10일자 기사 참조. www.ildaro.com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실제로 황교수가 연구에 사용한 배아는 대부분 불임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전문병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자랑했던 일명 '쥐어짜기' 기술은 불임클리닉의 임상경험 속에서 축적된 것이다.⁶⁾ 황우석 사건을 거치면서 그동안 묵인되었던 난자, 정자매매의 문제와 이미 1985년 국내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래 수많은 아기들이 이 방법을 통해 태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클리닉뿐만 아니라 난자, 정자, 배아의 사회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⁷⁾ 시험관 아기 기술을 포함한 신생식기술(Stanworth, 1987)⁸⁾은 잉여배아의 사회적 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난자공여 및 매매의 문제, 불임여성, 대리모 임신에 의한 모성 기능의 분화 -난자를 제공한 엄마, 자궁을 제공한 엄마, 양육을 담당하는 엄마 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재생산권의 설정과 젠더 정치학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황우석 사건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첫째, 황우석 사건의 기술적 매개였던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를 여성의 몸과 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황우석 사건을 통해 부각된 신생식기술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과 젠더간의 관계와 젠더정치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와 여성

'황우석 신드롬'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⁹⁾, 정치경제인들과의 유착관계,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 과학 사회의 검증시스템 부재 등을 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황교수의 연구가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열어 상용화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로 황교수와 언론은

-
- 6) 국내 체외수정기술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하정옥(2006c),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조.
 - 7) 이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서는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률' 제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리보장및인공생식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진행 중이다.
 - 8) 스탠워드(Stanworth, 1987)는 재생산과정에 개입하는 기술을 분류하면서, 피임,낙태와 관련한 전통적 기술과 대비해 제공자에 의한 인공수정 및 수정촉진제, 시험관 수정, 난자 제공, 배아 제공, 배아의 저온저장 등을 신생식기술로 분류하였다.
 - 9) 정부 각 부처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황교수에게 지급한 정부지원예산은 676억원에 달한다. 한재각(2006), "황우석 사태를 키워온 자 누구인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생명공학감시연대 토론회 자료집. p.25.

난치병, 불치병 치료의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고 강변했지만¹⁰⁾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12월 20일, 서울의대 교수 21명은 황교수의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의 의학적 응용가능성이 과장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설사 황교수의 연구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는 세포분화 과정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 '세계최초'의 신화, 성장주의에 입각해, 엄청난 자본을 투여하여 발전된 기술이 투자자본 회수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의 특성상 가난한 장애인, 난치병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 미래의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여성의 몸이 연구의 대상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줄기세포가 파킨슨씨, 척수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알려진 이상, 국익론과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 그리고 난치병 환자 및 가족들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줄기세포 연구는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줄기세포는 황교수가 진행했던 배아복제(체세포 핵이식)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험관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 태출, 태아조직, 성체 조직 등에서도 얻을 수 있다.¹¹⁾ 따라서 어떤 공급원을 통해 줄기세포를 얻을 것인가는 사회적 힘관계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 여기서는 황우석 교수의 난자수급과정을 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2-1. 황우석 사단의 눈에 비친 난자: 연구용 도구, 부차적인 문제

2004년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명공학으로 여는 밝은 미래'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황우석 교수는 강연 후 난자수급 과정에 대한 여성신문 기자의 질문에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과학자에게 실험재료를 질문하는 리포터는 없다. 예의에 어긋난다”며 대답을 회피했고 “도대체 어떤 여자들이 그런 걸 궁금해 하는가, 이상하다”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또한 불임 여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난자 적출이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조차 그는 “그 여자들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난자 적출은 마취 후 3분이면 끝난다. 통증은 없다. 거짓말이다”라고 반복했다. 그는 기자에게 “리포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배출하지 않는가? 그건 살아있나, 죽

10) “황우석 난치병 정복 길 열었다” 서울신문 2005.5.20.

11) 명진숙(2006b), “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와 여성”,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p.180.

어 있다, 살아 있는 것이다. 그걸 사용하는 것뿐이다”라고 교육(?)하기까지 했다고 한다.¹²⁾

황우석교수에게 난자는 연구실에서 사용될 실험재료일 뿐이며 난자 적출은 의과학적 처치에 불과하다. 이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공학적 시선과 공명한다. 공학적 시선은 ‘분자적 생명관’ 혹은 ‘기계적 환원론’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과 생명현상의 본질을 분자적 수준으로 환원시켜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생명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었다.¹³⁾ 생명공학자에게 있어서 인간은 단지 유기물질, DNA, 원료의 덩어리일 뿐이며 마음대로 분해하고 새로운 바이오기계로 조립할 수 있는 것이라는 에코페미니스트 미즈와 시바(Mies&Shiva)의 지적은 타당하다.¹⁴⁾ 여성의 몸은 총체적인 유기체가 아닌 자궁, 태아, 배아, 난자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다. 각각의 것은 하나의 개체성을 갖는 것으로 상정되면서 여성과 여성의 몸을 비가시화한다. 또한 실험실 안에서 개체성을 확보한 난자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위치 지워진다.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이 난자매매 의혹을 제기했던 PD수첩 방영 전날, 20명의 여성에게서 난자를 채취해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공급했고 실비차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밝히면서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공학적 시선에 포획된 난자의 위치와 연결되어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난자수급 과정의 윤리문제 보다 원천기술의 존재 유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또한 기술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기술중립론적 신화¹⁵⁾가 한 몫을 담당했다. 황우석 사단의 실험실에서는 애초부터 여성의 인권이나 윤리는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줄기세포 확보라는 성과만이 중요한 문제였다. 난자매매 사실을 밝힐 때의 당당함은 원천기술이 없다고 발표할 때의 침통한 표정과 얼마나 대조적이었던가! 성과주의적 과학기술문화는 국익론과 맞물리면서 여성의 몸과 건강, 윤리의 문제를 비가시화할 수 있었다.

2-2. 난자채취: 알권리와 건강권

주지하다시피 황우석교수 연구의 성공(?)은 수많은 난자확보의 용이성에 있었다. 이

12) “난자 질문에 분노하는 황박사”, 여성신문, 2004.11.26.

13) 김동광(2003), “생명공학의 위험구조”, 『문화과학』 제35호, 문화과학사, p. 94.

14) Maria Mies & Vandana Shiva(1993), 손덕수·이난아 역(2000), 『에코페미니즘』, p.231.

15) 기술중립론,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는 Bijker와, 송성수 편(1999),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새물결. 올, 생명공학에 내재된 가부장성과 인종주의를 비판한 책으로는, Maria Mies & Vandana Shiva(1993), 손덕수·이난아 역(2000), 『에코페미니즘』을 참조

는 세계의 생명공학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난자확보가 쉬운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겨 준 것이기도 하였고,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했다.

황우석 교수는 2004년 논문에는 16명의 여성으로부터 242개의 난자를 사용해 한 개의 줄기세포를 얻었으며, 2005년 논문에는 185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황우석 교수가 자신의 연구에 사용한 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21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⁶⁾ 이는 서울대 조사위가 밝힌 2,061개보다도 많은 것이다.¹⁷⁾ 또한 검찰의 최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2,236개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난자의 개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기술의 가능성이 과장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 가능성의 과장만큼 중요한 것은 난자채취 과정이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임여성이 자신의 임신에 대해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이든, 불임여성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이든, 복제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이든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초음파로 난소의 상태를 그리고 피검사로 호르몬의 수준을 측정 받고 7-10일간 배란 촉진 피하주사를 맞는다. 난자가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 난자를 잘 추출하기 위해 생식선자극호르몬(HCG)주사를 맞는다. 긴 바늘을 질, 자궁, 나팔관, 난소의 경로를 따라 넣은 후 바늘로 난자들을 흡수하는 시술을 받는다. 단, 불임여성에게 난자를 제공하기 위해 난자채취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불임여성의 생리주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위 과정을 거치기 전에 10-14일간 배란억제 피하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위 과정이 시작되면 불임여성 역시 에스트로젠 함유 약을 먹고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으면서 배아의 착상이 잘 되도록 자궁의 조건을 만든다.(Baum,2001:118, 조주현 2006:17, 재인용)

정상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경우, 한 달에 한 개 배출되는 난자를 시험관 아

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 문제에 대한 중간보고서」, 2006.2.2

채취기관	제공기간	제공자 수(명)	제공 횟수(회)	제공 난자 수(개)
미즈메디 병원	2002.11.28-2005.10.24	79	91	1,549
제일병원	2004.12.22	1	1	8
한양대병원	2005.4.12-2005.11.8	8	8	121
한나산부인과	2005.1.25-2005.12.24	33	37	543
계	2002.11.28-2005.12.24	121	138	2,221

17)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2006.1.10.

기기술이나 배아복제연구를 위해 여러 개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과배란제 사용이 필수적인데, 과배란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루프론(Lupron)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예이며, 불임시술용 과배란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구용 호르몬 제제 ‘클로미펜’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장기 추적조사 결과, 이 제제를 사용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궁암의 발생비율이 2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폐경기 여성의 소변을 여과시킨 호르몬 제제 휴메곤(HMG, 인체폐경성선자극호르몬)과 유전자 변형 FSH 호르몬(난포자극호르몬) 제제의 경우, 난소가 부어올라 복수에 물이 차고, 탈수 상태가 되며, 혈전증과 호흡장애를 일으켜 죽음까지 이르기도 하는 ‘난소과잉자극증후군’(OHSS: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의 위험이 있다.¹⁸⁾ 실제로 영국에서는 난소과잉자극증후군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¹⁹⁾ 그런데 외국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관련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문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휴메곤’의 경우, 인간광우병과의 관련성이 우려되어 일본에서는 제조를 중지시켰고 영국에서는 광우병이 한 건 이상 발생한 나라 국민의 소변을 재료로 만든 의약제품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한국 식약청은 ‘휴메곤’의 안전성에 대한 일다 기자의 정보문의에 제약회사의 허가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²⁰⁾

난자채취 과정이 이렇듯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팀에게 가장 많은 난자를 제공한 미즈메디 병원과 한나산부인과 의원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자체 동의서를 사용하면서, 난자채취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난자제공자들에게 기증된 난자에 대한 권리 포기에 대한 것들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생명윤리위의 최종보고를 위한 추가조사과정 중에는 부작용이 발생해 입원까지 한 여성에게서도 난자를 재차 채취하였으며, 난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기 중 일부인 난소까지 적출해 연구용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자신의 몸에서 난소가 적출된 사실도 모르거나 난소적출은 알았지만 연구용으로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다수였다고 밝혀졌다.²¹⁾ 이는 명백히 국제적 의학윤리규범인 뉘른베르크 강령의 위반

18)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문제”, 조이승미, 2006.8.2. 일다 www.ildaro.com

19) 영국의 재키 러쉬튼이라는 29세의 여성은 시험관 수정에 필요한 호르몬 처치를 받고 난소과잉자극증후군으로 2005년 6월 사망했다. 박진희(2006), “황우석 사태와 여성”, 「황우석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교협 학술토론회 자료집.

20) 의약품 정보문의에 ‘제약회사 허가 받아오라’, 조이승미, 2006.7.26. 일다 www.ildaro.com

21) “황교수, 연구원 난자제공 계속 허위 진술”, 오마이뉴스, 2006.2.2.

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여성건강권과 선택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건강권 운동은 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요구, 사용할 수 있는 난자의 범위 규정²²⁾, 엄격한 동의절차의 보완뿐만 아니라 난자채취 과정에 쓰이는 의약품들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및 안전성 검증요구, 난자채취 여성에 대한 의료적 사후조치 등을 의제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2-3. 난자 기증, 매매: 사회문화적 고려 없는 자발성?

여성건강권과 함께 황우석 교수의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또 다른 논란 중 하나는 여성 연구원과 매매된 난자의 사용이었다. 2004년 5월 6일 『네이처』의 연구원 난자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바로 다음날 황교수는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바가 없으며 몇몇 학생들의 난자 제공의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²³⁾ 이후 2005년 11월, 제럴드 새튼 교수가 난자 채취의 비윤리성 등을 거론하며 황우석 교수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이틀 뒤, 황우석 교수는 CNN이 주최하는 미디어컨퍼런스에서 난자제공 여성들을 '성스러운 여성들'로 추켜세우며 자신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에는 연구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난자기증재단'이 설립되었고 연구용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여성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난자 매매 의혹과 관련한 'PD수첩'의 방송이 방영되자 연구원의 난자 이용 사실을 『네이처』 보도 당시 알게 되었으나 해당 여성 연구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연구원 난자사용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증자 동의의 자발성 여부는 얼마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가와 기증자의 위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려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2004년과 2005년은 사이언스에 실린 두 논문을 통해 황교수의 신화가 절정에 달해 있던 시기였고, 국익논리는 윤리논리를 압도했고, 난자기증이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여기에 가족과 국가를 위한 배려와 희생을 여성의 본질적 정체성으로 내면화 하도록 하는 성별 사회화 과정이 맞물리면서 여성들의 난자기증 행렬은 가능했던 것이다. 난자기증행렬에 동참했던 여성들의

22) 여성건강권을 위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난자기증에 대한 동의의 전제하에, 호르몬 자극 없이 하나의 난자가 채취되는 자연적인 사이클에서의 채취, 질병으로 인해 난소절제술이나 난관결찰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채취, 부인과 수술 동안에 채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Emily Galpern(2006), "Beyond Embryo Politics: Women's Health and Dignity in Stem Cell Research",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 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p.61.

23) "황우석 교수팀 연구 성과 윤리성 논란", 세계일보, 2004.5.7.

자발성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여성연구원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에게 제공된 동의서 양식 또한 일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난자채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황교수는 난자가 필요할 때 여성연구원들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배포하고 서명하도록 했으며, 이 동의서의 서명은 황우석, 강성근, 이병천 교수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황교수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이미 난자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자발적 기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적인 연구 규범인 헬싱키 선언은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와 종속관계에 있거나 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그러나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들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윤리 규범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교수의 절대적 권력이 관철되는 위계적인 연구실 문화 속에서 난자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⁵⁾ 더군다나 교수임용과정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²⁶⁾ 따라서 연구원 난자기증의 자발성 여부는 위계적인 연구실의 조직문화와 연동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황교수에게 제공된 난자 중 다수가 매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매된 난자는 DNA뱅크라는 전문 브로커 업체로부터 미즈메디 병원에 의해 제공되었고 이들 중 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여성들이었다고 한다.²⁷⁾ 이는 배아복제연구가 난자매매를 확산할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배아복제 연구와 상관없이 난자매매는 오랫동안 공공연한 사실이었다.²⁸⁾ DNA뱅크의 경우, 2001년 창립된 이래로 주로 일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난자거래를 해 왔으며, 인터넷 상에서 난자매매 사이트나 대학가 주변 혹은 화장실에서 광고지나 스티커를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아진 난자는 불임시술을 목적으로, 연구용으로, 해외수출용으로 거래되면서 난자시장을 형성한다. 난자시장의 형성은 난자 판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이전에 어떤 여성의 난자가 어떤 조건 및 상황

24) 헬싱키 선언(총 32개 조항)의 주요원칙에 대해서는, 명진숙(2006b), "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와 여성",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p.183 참조

25) "교수는 제왕... 군대식 연구풍토", 한겨레, 2005.12.26.

26)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 중 한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한 시점에 한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대가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양구 외(2006), 「침묵과 열광」, 후마니타스, p.40.

27) 미즈메디 병원을 통해 제공된 매매 난자는 1,336개에 달한다.

28) 정부는 2002년부터 난자와 정자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2005년 생명윤리법 발효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백영경(2006), "생명윤리를 넘어서: 난자 거래의 현실과 여성주의적 개입",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pp.246-247.

속에서 거래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성의 몸과 성이 일상적으로 판매되는 사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 시장 구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난자나 성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여성들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난자판매 여성의 도덕성이나 자발성을 논할 수 없다. 난자시장은 일국적 단위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난자매매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느슨하거나 경제적 저개발국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다.²⁹⁾

또한 불임시술이나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배아선별을 통해 제레미 리프킨(Rifkin, J)이 예견한 ‘맞춤아기³⁰⁾’를 생산할 작정으로 난자가 거래된다면 고학력의, 젊고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의 난자가 고가에 거래될 것이며 실제로 그러하다.³¹⁾ 난자의 상업화는 우생학적 사고를 재생산하며 외모, 인종, 계급에 따른 여성들 간의 위계설정을 강화할 것이다. 더욱이 생계적 차원의 난자 판매 여성일수록 난자채취의 위험성과 사후 안전적 의료조치 및 관리로부터 배제되며, 그럼으로써 더욱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문화 속에서의 여성 몸의 위치, 여성의 지위,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난자거래 및 기증의 정치학을 구성하기 어렵다.

3. 신생식기술과 재생산권: 다양한 ‘몸’들의 경합

황우석 사건을 통해 난자채취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불임클리닉을 통해 난자가 제공되었음이 밝혀지면서 1985년, 국내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래로 수많은 아기들이 이 방법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회적 의제화가 되지 못했던 인공생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³²⁾ 현재,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재생산권리보장및인공생식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법안은 인공생식시술의 대상범위를 법률혼, 사실혼

29) 가난하고 반문맹인 젊은 루마니아 공장 노동자들은 250불에 난자를 반복적으로 매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이 금액은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 이들 중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고 의학적인 사후 점검이 부족했고, 다른 의학적인 기준들이 위반되었다는 점을 문제제기 하는 법률소송을 진행하고 있다.(Magureanu, 2005, Sexton, 2005: Diane Beeson2006:54 재인용)

30) Rifkin, J., 전영택·전병기 옮김,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1999.

31) “미모의 미국 여대생들, 너도 나도 난자 팔아요”. 세계일보 2006.3.18.

32) 1985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래 2002년 현재, 전국 100여개소의 불임클리닉에서 전세계 시험관아기의 20%인 약 8천명의 아이가 매해 시험관 아기 시술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김명희, 2003:143, 조주현, 2006:24재인용).

관계의 불임부부로 제한하고 대리모 출산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³³⁾ 또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하겠다는 인공수정 가족법은 난자 기증자를 가족관계 내부에서는 금하고 인공수정관리센터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페미니스트들은 임신과 출산이 사회문화적 사건이며 여성의 몸이 근대국가의 강력한 출산력 조절정책의 통제 대상이 되어 왔음을 밝혀 왔다(김은실, 2001). '가족계획정책'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 출산력 조절 정책의 성공이 자기 출산력을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행위성과 맞물려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의 출산 조절 프로그램과 가부장적 가족구조 하에서의 제한적 선택이었다(배은경, 2005). 또한 정부의 출산력조절정책은 출산이 의료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³⁴⁾ 출산의 의료화 과정은 가정에서의 출산이 조산원, 병원 등의 시설로 옮겨가고 생애주기의 자연스런 사건에서 각종 의과학적 처치와 의료전문가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변모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생식하는 여성의 몸이 의과학적 시선 속에서 정상/비정상의 경계가 규정되는 과정이기도 했다(조영미, 2003). 가부장적 가족, 국가, 그리고 출산의료기술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출산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항상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지 재생산권³⁵⁾의 주체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다.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재생산권의 확장과 사회화를 주장해 왔었다.

그렇다면, '시험관 아기기술'로 대표되는 신생식기술은 여성의 몸 및 재생산권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신생식기술이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여성들 간의 차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식기술은 불임을 극복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모성을 생물학적 모성으로 환원시켜 혈연주의적 가족구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성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임신을 여성의 본질적 정체성으로 위치시키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한다. 그러나 피임 및 낙태기술이 국가의 강력한 저출산 정책 속에서 여성 몸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적은 수의 자녀 갖기라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켜 준다는 점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기술친화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피임이나 낙태와 같은 전통적 생식기술이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신생식기술은 아이를

33) 손봉희(2006),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민우회의 대응과 과제",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학회, 「여성의 몸과 국가주위: 난자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pp. 51-53.

34) 1960년대는 거의 가정에서, 1970년에는 시설분만을 17.6%였던 것이 1985년 75.2%, 2000년 현재 99.9%로 거의 모든 출산과정이 의료의 영역에 편입되었다. 조영미(2003),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42-50.

35) 1960년대 서구의 여성건강운동 이후로 재생산권은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통합권을 중심으로 재생산(생식) 뿐만 아니라 성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서는 재생산권을 생식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선택권으로 제한한다.

낳을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성의 본질적 정체성을 모성으로 환원하는 사회문화와 맞물려 여성들에게 더욱 친화적인 것으로 내면화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든, 과거의 가족계획정책 속에서 출산을 억제하든간에 기혼여성의 아이 낳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다.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은 반드시 한 아이 이상을 가져야 하며, 아이를 갖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신생식기술을 이용하는 불임여성들은 자신의 모성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이는 푸코의 지적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미시권력으로, 여성들의 몸에 각인되어 스스로 수용하게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불임여성들은 신생식기술이 지니는 가부장적 정치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물학적 아이 갖기를 원하고 실천하고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여성이나 레즈비언 여성의 경우에도, 신생식기술은 재생산권의 확장으로 의미화 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여전히 혈연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소위 엄마-아빠-자녀로 구성된 형태만을 '정상적' 가족으로 상정하는 이분법적 기준을 해체하는 정치성도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을 신생식기술의 피해자로 위치지우기는 어려우며 재생산권에 대한 의미규정도 여성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여성의 욕구를 정의할 것이며, 그 욕구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전략이 필요하다(소위키, 1995). 또한 기술적으로 주어진 선택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의과학적 전문가 집단과 국가의 여성 통제강화로 넘어가지 않고 실질적인 여성의 재생산권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가 신생식기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여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Petchsky, 1987).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생식 관련 법안은 인공생식 시술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개입과 임신 성공률만을 염두에 둔 의료관행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인공생식 시술대상 범위를 법률혼, 사실혼 부부로 제한함으로써 이성애 부부 중심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리모 전면 금지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대리모 이외의 방법으로는 임신, 출산이 불가능한 주체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제약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³⁶⁾ 이러한 쟁점들은 재생산 영역이 현실적, 기술적 조건과 복잡한 사회문화적 그물망 속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몸'과 '권리들'이 경합되는 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6) 손봉희(2006),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민우회의 대응과 과제",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학회,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 난자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pp. 51-53.

따라서 법안 마련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술에 대한 젠더 정치학의 구성을 위하여

황우석 사건은 기술이 사회와 별개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젠더와도 별개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과학기술의 객관성, 보편성, 가치중립성의 신화를 비판하면서 과학기술이 서구 백인 중산층 이상 남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밝혀왔다(Keller, 1985; Harding, 1986a, 1991b; Haraway, 1991). 생명과학기술의 경우, 그것의 발전 및 적용의 사회적 의미가 국익 및 난치병 극복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고 이것이 혈연중심적 가족주의 및 모성이데올로기와 맞물리면서 여성의 몸을 연구수단 및 기술적 적용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황교수의 배아복제 연구는 기술의 성과나 상용가능성 자체가 과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하딩(Harding, 1991b)의 지적대로, 누구를 위한 과학이며 누구를 위한 지식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의 시선은 여성의 몸을 대상화, 분절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 생식에 대한 새로운 의미규정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몸'과 '권리들'이 경합하고 있는 과정 중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과학기술 영역에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현재의 상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의 진입이 필요하다(윤정로, 2000).³⁷⁾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에 대해 여성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다. 황우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황교수와 동맹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많은 여성들을 보았고 그들 역시 지배적인 과학주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³⁸⁾ 또한 생물학적 여성의 참여가 마치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

37) 한국의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윤정로(2000), 『과학기술과 한국사회』, 문학과지성사, 9장, 10장 참조

38) 대표적으로 황교수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안규리 교수와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을 들 수 있다. 또한 박근혜를 비롯한 수많은 여야 여성정치인들도 황교수의 후원에 동참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경우, 과학기술자운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난자출처 의혹에 대해 이미 윤리적 검토가 끝났다고 황교수를 옹호했고 연구원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하고 매매된 난자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연구윤리나 여성인권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황교수의 연구에 265억원이라는 재정을 지원해 주고, '황금박쥐'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황교수를 위해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녀는 과학기술보좌관

는 것처럼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여성계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요구에 과학기술부는 위원회의 3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생명공학자이거나 전문직 학자로서 남자채취와 관련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명진숙, 2003a;46-47). 따라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젠더정치는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명과학기술이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그것이 생명윤리 의제나 법제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서 사용되는 각종 의약품들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기술적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증된 정보제공, 의과학자들의 자의적이거나 재정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여성의 몸이 합부로 착취되거나 상품화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요구,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사회적 관리체계의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문화 자체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과 개입이 필요하다. 기술문화에 대한 비판은 생명공학적 재현이 지배적인 사회문화와 맞물리면서 여성의 몸, 생식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적 실천이 될 것이다. 이는 여성의 몸이 생명공학발전의 '자원' 내지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하는 비판을, 여성인권 '보호'의 요구로 결론짓는 것을 넘어서 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재현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떤 인간을 만들어가고 어떤 여성주체를 체현, 형상화할 것인가로 연결된다. 예컨대, 난자를 물리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 어떤 고통을 수반하고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넘어서 이미 난자를 특정한 방식으로 담론적, 시각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분리시킨 기술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몸과 정체성, 관계들을 재구성하면서 기존의 가족, 친족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³⁹⁾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성의 몸, 정체성, 관계들의 재구성은 여성의 몸 체험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윤리 의제 설정이나 법제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비가시화되었던 것처럼, 남자채취, 불임시술, 대리모 등을 경험한 여성들의

을 그만두고 대학에 복직한 최근까지도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김선종의 쉬어심기가 없었다면 황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는 성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종만 없었으면 황우석은 줄기세포 성공" <신동아>, 교수직 복귀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 인터뷰, 프레시안 2006.10.18.

³⁹⁾ 박소영(2006), "재생산과 복제: 페미니즘의 상상력, 생명공학의 상상력", 「여/성이론」 14호, p. 33-35.

산 체험은 충분히 공적 담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 난자공여나 매매, 불임시술을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생식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가족관계나 사회문화, 의료전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며 어떤 의미를 내면화하고 저항하고 협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성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양구·김병수·한재각(2006), 『침묵과 열광』, 후마니타스.
- 김동광(2003), “생명공학의 위험구조”, 『문화과학』 제35호, 문화과학사.
- 김명진(2005), “황우석과 ‘나쁜’ 언론”, 『환경과 생명』 통권 45호, 사단법인 환경과생명.
-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 문화.
- 김환석(2006),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생명공학감시연대 토론회 발 표문.
- 명진숙(2003a),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과 쟁점”, 2003년 한국여성학회 제2차 심포지움 자료집.
- _____ (2006b), “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와 여성”, <생명과과학기술 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 박소영(2006), “재생산과 복제: 페미니즘의 상상력, 생명공학의 상상력”, 『여/성이론』 14호 박진희, 홍성욱(1999), “여성과 기술”,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창작과비평사.
- 박진희(2006), “황우석 사태와 여성”, 『황우석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교협 학술토론회 자료집.
- 배은경(2005),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 역사』 제67권,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지성사.
- 백영경(2006), “생명윤리를 넘어서: 난자 거래의 현실과 여성주의적 개입”, 『생명과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 손봉희(2006), “생명과학기술 대응활동- 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생명과과학기술 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 윤정로(2000), 『과학기술과 한국사회』, 문학과지성사.
- 위비 바이커 외, 송성수 편저(1999),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새물결.
- 자나 소위키(1995), “어머니 길들이기-페미니즘과 새로운 재생산 테크놀로지”, 황정미 편역,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 조영미(2003),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영미(2006), “불임기술과 의료권력 그리고 여성”, 『여/성이론』 14호
- 조주현(2006), “난자: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한국여성학』 제

22권 2호.

- 주디 왓츠맨(1991), 조주현 역, 『페미니즘과 기술』, 당대, 2001.
- 하정옥(2000a), "한국의 생명공학기술과 젠더", 『여성과 사회』 11호, 한국여성연구소.
- _____(2006b),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사회적 관리 미비와 재생산의 비가시화: 체외수정기술 자료 구성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23집 1호, 한국여성연구원.
- 하정옥(2006c),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재각(2006), "황우석 사태를 키워온 자 누구인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생명공학감시연대 토론회 자료집.
- 허라금(2003), "생명윤리와 여성", 『생명공학과 여성』 2003년 한국여성학회 제2차 심포지움 자료집.
- Emily Galpern(2006), "Beyond Embryo Politics: Women's Health and Dignity in Stem Cell Research",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 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 Baum, Kenneth(2001), "Golden Eggs: Towards the Rational Regulation of Oocyte Don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2001(1), pp.107-166.
- Beeson, Diane(2006),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의학적 위험성과 윤리적인 문제",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 Harding, Sandra(1986a),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이재경·박혜경 역(2002), 『페미니즘과 과학』, 이화여대 출판부.
- _____(1991b),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Harraway(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민경숙 역(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 Keller, Evelyn Fox(1985), *Reflections on Gender and Science*, 민경숙·이현주 역(1996), 『과학과 젠더』, 동문선.
- Mise, Maria & Shiva, Vandana(1993), 손덕수·이난아 역(2000), 『에코페미니즘』, p.231.
- Petchesky, Rosalind(1987), "Foetal Images: The Power of Visual Culture in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Reproductive Technologies; Gender, Motherhood and*

Medicine, Stanworth, Michelle ed., Cambridge; Polity Press.

Rifkin, J., 전영택 · 전병기 옮김,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1999.

“여성인권 뒤로하는 여성단체, 왜? -난자윤리문제 가장 늦게 입장 표명해 빈축”, 윤정은(2006.1.10), 일다, www.ildaro.com

“황우석 난치병 정복 길 열었다” 서울신문(2005.5.20).

“난자 질문에 분노하는 황박사”, 여성신문(2004.11.26).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문제”, 조이승미(2006.8.2) 일다 www.ildaro.com

의약품 정보문의를 ‘제약회사 허가 받아오라’, 조이승미(2006.7.26). 일다 www.ildaro.com

“황교수, 연구원 난자제공 계속 허위 진술”, 오마이뉴스(2006.2.2).

“황우석 교수팀 연구 성과 윤리성 논란”, 세계일보(2004.5.7).

“미모의 미국 여대생들, 너도 나도 난자 팔아요”, 세계일보(2006.3.18).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2006.1.18), 생명공학감시연대 토론회 자료집.

「황우석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06.3.10),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서울대민교협 학술토론회 자료집.